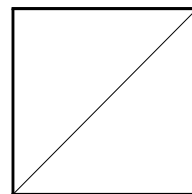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48 호
보 고 연 월 일	2022. 10. 12. (제 18 차)

보
고
사
항

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추진 보고

금융위원회 회의 안건

제 출 자	금융감독원장 이 복 현
제출 연월일	2022. 10. 12.

1. 보고주문

「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(FSS, the F.A.S.T. 프로젝트)」을 <별지>와 같이 보고함

2. 보고이유

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*에 적극 부응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**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「금융감독 업무혁신 로드맵」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고자 함

* [국정과제 34] 미래지향적 금융혁신 ①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개선

** '22.7월부터 금융위원회 주관 「금융규제혁신회의」 운영 중

3. 주요골자

가. 기본방향

-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관행을 발굴하여 개선
-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혁신 및 발전을 촉진

나. 주요내용 (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)

-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및 인허가 지원시스템((가칭)인허가 START 포털) 등 하드웨어(Hardware) 확충

-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, 제재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및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, 신속한 사후구제,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 ‘일하는 방식’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(Software) 혁신
- 금감원 내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혁신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

4. 참고사항

가. 「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FSS, the F.A.S.T. 프로젝트」 : <별지>

나. 제18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2.10.7.) 보고

다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

< 별지 >

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

FSS, the F.A.S.T. 프로젝트

2022. 10.

금 융 감 독 원

1 추진 배경

- 금융당국은 디지털화, 빅블러 시대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*해 나가기로 함

* '22.7월부터 금융위 주관 「금융규제혁신회의」에 참여하여 규제혁신 추진 중

- 금융규제 혁신이 체감도 높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금융감독·검사 실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의 '일하는 방식' 변화가 중요

※ [국정과제 34] 미래지향적 금융혁신 ①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개선 관련

- 그간 금감원의 대외 소통이 부족하고, 금융감독·검사·제재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금감원이 시장과 업권의 신뢰를 얻는데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

⇒ 「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(FSS, the F.A.S.T. 프로젝트)」을 마련하고, 이를 실천하는 세부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

2 추진 방향

-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실하게 개선
 -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관행을 발굴하여 개선
 - 금융소비자보호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혁신 및 발전 촉진

※ 법규 제·개정이 필요하거나 금융위 금융규제혁신 과제와 관련이 있는 금감원 혁신수요도 금융위 「금융규제혁신회의」를 통해 적극 추진

“FSS, the F.A.S.T.” 프로젝트

- Fairness, Accountability, Support, Transparency -

추진 방향

하드웨어(Hardware) 정비 : 금융감독 혁신 전담 조직 설치

소프트웨어(Software) 혁신 :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

주요 과제

01 하드웨어 금융감독 업무혁신 지원조직 구축

- ▶ 금융감독 업무혁신 전담조직
- ▶ 인허가 START 포털 시스템

02 소프트웨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처리

- ▶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 프로세스 개선
- ▶ 외국·일반사모펀드 등 합리적·효율적 심사



03 소프트웨어 금융감독원 업무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회사 권익보호

- ▶ 회계감리기간 명문화,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
- ▶ 제재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 안내 강화 등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

04 소프트웨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

- ▶ 생명·손해보험 등 민원·분쟁 신속 처리
- ▶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 확대 및 분쟁처리결과 활용도 제고



05 소프트웨어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및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

- ▶ 업무보고서 간소화, 금융회사 자료제출(CPC) 요구관행 개선

적극행정위원회 구성,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

①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하고, 인허가 지원시스템(인허가 START 포털)을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- 인허가 신청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 하는 금융감독 One-stop 서비스팀을 신설,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고
 -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·비용절감 및 심사의 신속성 제고
-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하여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상시 포착·분석하고,
 -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개선

<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신설(안) >

- 금융감독 One-stop 서비스팀 (금융회사 소통창구)
 - 인허가 신청 前 준비단계 집중 지원, 다수 부서 관련사안 업무협의 주관 등
 - 금융혁신팀 (혁신추진 조직)
 -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·감독관행 발굴 및 개선, 적극행정 추진, 비조치 의견서 수요 접수, 사전협의 조정·관리 등
- ※ 조직신설 관련 세부사항은 예산·정원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최종 결정·시행

- (가칭)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하여 인허가,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
 - 인허가 신청 급증에 따른 적체상황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·대응하고, 인허가 예측가능성 및 심사의 투명성 강화

< (가칭)인허가 START 포털 구축(안) >

- 인허가 신청 前 단계에서 실무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
 - 시스템을 통한 사전협의 신청 → 인허가 서류 및 절차 안내 → 담당자 면담일정, 진행상황 등 조회 → 사전협의(담당부서) → 인허가 신청 (금융감독 One-stop 서비스팀이 사전협의 쏘단계 총괄·조정)



②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.

- 외국·일반사모펀드·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합리적·효율적인 등록·보고 심사를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*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,

* 심사항목 간소화, 제출서류 접수시 형식적 요건 현장 사전점검(Quick-Review) 실시, 금융회사 방문을 통한 일괄심사 등을 통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

- 권역별 인허가·등록 수요를 분석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에 심사인력을 충원(예 : agile 조직 등)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지원

- 금융 융복합화 등에 따른 다수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소통 채널을 일원화(금융감독 One-stop 서비스팀 신설 예정)

③ 검사·조사·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,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(원칙적 1년),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·신속 조사 착수*,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,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

*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하고, 각 사건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사자원 투입

- 금융회사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제재 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하는 한편,

- 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

- 제재심 부의안건 및 회의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 효율적인 제재심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시간 대기 및 업무공백 등 불편 최소화

4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
- 분쟁 배정방식* 변경,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** 도입,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(⇒'23.3월까지 분쟁전수 약 60% 감축 목표)

* (현행) 무작위 배정방식 → (개선) 분쟁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배정

** (현행) 선입선출 처리방식 → (개선) 분쟁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중처리

※ 집중심리제 : 법률적 쟁점 또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 집중심리제를 운영하여 처리방향 등을 신속히 결정

-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공개 확대, 자율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*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유도

*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민원 통계 및 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에서 제외, 자율조정 실적 우수 금융회사 포상 등

5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등이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.

-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,

- 금융회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(CPC*)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

* Central Point of Contact

-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(금감원 산출)을 조기 제공 (예:1개월 단축)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하고,

- 수시 변동되는 표준약관 등 규정 개정사항을 특정시점(회계연도 개시일 등)에 일괄 시행*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

* 단, 소비자 피해 우려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

⑥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혁신추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,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.

- 금감원 내 적극행정위원회(위원장: 수석부원장)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 적극행정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
-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적극행정 우수부서·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한편,
- 적극행정 면책 및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 강화

3 향후 추진계획

- 각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하되,
 - 최대한 '23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
-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필요시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,
 -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계획

☞ (붙임) 「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주요과제」 참조

*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은 향후 추가적인 실무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·시행

①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구축		
①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신설(안) - 인허가 신청前 준비단계 집중지원, 사전 상담·안내 등 금융회사 소통창구인 '(가칭)금융감독 One-stop 서비스팀' 신설 -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추진을 위한 '(가칭)금융혁신팀' 신설		기획조정국
② 인허가 START 포털시스템 구축 - 인허가 신청 前 단계에서 실무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전면담 신청 등 인허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관리		감독총괄국
②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처리		
③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 -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 후 즉시 인허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·금감원 인허가 시스템 연계* 추진 등 * 기존에는 금융위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후 금감원에 검토의뢰 공문이 접수되기 전까지 심사개시 불가능		감독총괄국
④ 외국·일반사모펀드 등록·보고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 투명성 제고 - 등록·보고 심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심사항목 간소화 추진		자산운용 감독국
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합리적인 등록 심사를 위한 처리방식 변경 및 심사 투명성 제고 - 등록서류 현장 접수시 Quick-Review를 시행하여 서류보완에 따른 지연을 방지하고, 등록처리 단계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투명성 제고		여신금융 감독국
⑥ 금융상품 사전협의 기간 단축 및 심사 투명성 제고 - 상품개발 법률이슈 관련 신속한 사전협의 진행 및 심사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통지 구체화 등 투명성 제고		금융상품 심사분석국
⑦ 감독업무 협의 과정에서의 비효율 개선 및 금융회사 접근성 제고 - 다수 부서 관련사안의 경우 소통채널 일원화 등 개선 (신설 예정인 One-stop 서비스팀에서 주관)		기획조정국
③ 금융감독업무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회사 권익보호 강화		
⑧ (검사) 수검직원 사적 정보보호 강화 - 디지털 자료 등 수집시 금융회사 수검직원의 동의 및 참관 등을 보장하고 자료 폐기절차 등 마련		감독총괄국
⑨ (검사)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- 다수부서 관련사안의 경우 주무부서를 신속히 지정하고, 금융회사 사전협의 요청시 부서장 신속보고 및 법무실 통보절차 마련		법무실
⑩ (제재) 제재심의위원회 변호인 조력권 안내 강화 및 제재대상자 편의성 제고 -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 도입, 금융회사의 제재심의위원회 장시간 대기 방지를 위한 회의시간 탄력적 운영 등		제재심의국

⑪ (감리)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 및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- 감리·조사기간 명문화(원칙적 1년),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	회계심사국
⑫ (조사) 선택과 집중을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 프로세스 개선 -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 착수기준을 정비하고, 각 사건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사자원 투입	조사기획국
⑬ (소비자보호)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신속 통보 - 금융회사가 실태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에 적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신속 통보	금융상품 판매분석국
4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	
⑭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 - 분쟁유형별 집중처리방식 도입,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강도 높게 실행	분쟁조정1국
⑮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 활성화 및 민원·분쟁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 - 금융회사별 민원통계 등에서 자율조정 민원을 제외하여 자율처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, 주요 민원분쟁 처리결과를 분기별 대외 공개	금융민원 총괄국
⑯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제고 등을 통한 민원·분쟁조정 효율성 제고 - 분조위에서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기준 심의, 분조위 개최 일정 정례화 등 활성화 추진	금융민원 총괄국
5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및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	
⑰ 업무보고서 전면 정비 등 간소화 -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 폐지 또는 보고주기 완화 추진	감독조정국
⑱ 금융회사 자료제출요구(CPC) 시스템 및 요구 관행 개선 - CPC시스템 불편사항 개선을 통한 금융회사 이용 편의성 제고, 자료기준 명확화 및 질의에 대한 신속 회신 등 추진	감독총괄국
⑲ 보험상품 개발·개정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- 보험회사에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(현행 10월말 → 9월말)하고, 표준약관 개정사항 등을 특정시점(예: 회계연도 개시일) 일괄 시행	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 제도실
⑳ 상장회사의 공시역량 제고 지원 - 공시서류 작성능력 제고를 위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, 찾아가는 기업공시·불공정거래 설명회 실시 등	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
※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	
-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- 기존 적극행정협의회를 확대·개편(위원장 지위 격상, 민간위원 신규 위촉 등)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	기획조정국
-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 - 우수부서·직원 포상 확대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검토	기획조정국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정책과	기획조정국
연 락 처	02-2100-2833	02-3145-5900